

G-Welfare Weekly Report

경기복지재단 | 발행인 (박춘배)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 신관3층 | Tel. 031-267-9399 | www.ggwf.or.kr | 2015.10.21.

01

중앙정부 정책동향

1.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시안 발표('15.10.18.)

01 주요내용

-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0월 18일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5개년 기본계획안(2016~2020년)을 발표, 고용·교육·주거 등 근본원인 중심으로 대책의 패러다임 전환
 - 이번 계획은 고용·주거 등 청년들이 결혼을 주저하거나 포기하도록 만드는 사회경제적 원인 해결에 집중, 일-가정양립 등 기혼가구의 양육부담경감에 초점을 둔 기존 계획과 차별화

<2020년 출산율 1.5명 달성 위해 신혼부부 주거지원 강화·청년 고용 확대>

-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자금 대출한도 인상, 공공임대주택·전세임대주택·국민임대주택 등 부부연령 별 가점 부여
- 2017년까지 공공부문 청년 일자리를 4만개 창출, 민간부문에서 청년고용증대세제*를 신설

<출산·양육에 대한 정책 지원 강화>

-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아빠 육아휴직 인센티브 확대, 맞춤형 보육체계 개편 및 초등돌봄 서비스 내실화

<고령사회 삶의 질을 위한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및 의료·주거문제 해결>

- 국민연금 수급시기와 퇴직 정년의 일치, 고령자 대상 전세임대제도 신설, 치매·장기요양에 대한 사회적 돌봄 체계 강화, 고령운전자 안전관리 대책 마련
- 60세 정년 안착을 위한 고용시스템 개편과 장년기 근로시간 단축 및 임금피크제 도입 확산, 노인의 연령 기준을 현재 65세에서 70세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 등

- 이전 계획과의 차별화를 시도하였으나, 현실성이 낮거나 특정 집단에 집중하면서 역차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기존 보다 더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의견도 존재
 - 전세자체가 없는 현실에서 전세대출 금액 인상은 오히려 전세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으며,
 - 신혼부부에게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물량을 확대하면 주거 취약가구에의 신(新)역차별 문제와 상위계층까지 주거지원을 하게 될 경우 공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음
 - 실업, 비정규직 등 청년들의 고용문제의 대안으로 '노동시장 구조 개혁' 을 제시하여 노동 불안정성을 더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임

02 경기도에의 시사점

- 전국과 비교하여 경기도 출산율은 높고 노인인구비율은 낮지만, 경기도 시군 간 차이가 큰 것이 특징이므로 이를 조정하는 “인구정책 조정회의” 를 구성·운영
 - 저출산과 고령화를 특정 연령이 아닌 경기도 인구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한편, 인구정책과 직간접으로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영역을 총괄하고 통일된 정책 추진을 위한 구성
 - 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인구관련 정책 부서의 부서장(과장)을 인구정책책임관으로 지정
- 시군의 인구정책 추진현황 및 성과를 점검하고 평가하는 등 인구변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인구변동자료를 축적,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시군 '인구기상예보제' 실시

*청년 정규직 근로자가 전년 대비 증가한 기업에 1명당 최대 500만원의 세액공제

2. 국내 크라우드 펀딩 활성화 시동

01 주요 내용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크라우드 펀딩 운영 핵심인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및 희망자를 대상으로 온라인소액투자(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 예정(’15.10.26.)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매뉴얼(초안)과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의견 수렴을 통해 최종 완성본을 내놓을 계획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은 온라인 펀딩 포털을 통해 창업 기업이 발행하는 채무증권, 지분증권, 투자계약 증권 등을 모집하거나 사모에 관한 중개를 하는 사업자임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의 등록 요건을 최소화한 것이 특징
 - 중개업자는 ‘등록’ 만으로 사업을 할 수 있으며, 자기자본 기준은 5억 원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되어 있음(일반 투자자의 자기자본 기준은 최소 30억 원임)
 - 또한, 중개업자가 온라인상 단순중개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을 감안해 준법감시인 선임, 경영건전성 및 재무 건전성 유지 등 금융투자업자에게 적용되는 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함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조직은 은행 등 금융투자업 조직뿐만 아니라 비금융업자의 경우에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허용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을 목적으로 신설된 법인만이 아니라 기존 증권사, 은행, 보험회사,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증권금융, 종합금융, 자금중개, 외국환중개, 주택금융공사, 상호저축여신전문회사, 신탁농협수협 등 금융투자업 겸업이 허용되는 사업자 뿐만 아니라 비금융업자의 경우에도 현재 수행하고 있는 영업이 ‘자본시장법상 부수업무 기준’ 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사업 수행을 허용
- 신설 법인과 기존 금융업자 간 등록요건을 달리 적용하여 일부 기준의 형평성이 문제로 지적

구분	신규	기존 금융업자	
		금융투자업자	겸영금융투자업자
등록요건	자기자본 5억원 이상 대주주 자격 인적물적 설비 사업계획 등	자기자본 5억 원+기준업무단위 자기자본(70%)이상 대주주자격 완화 타 요건은 신규와 동일	자기자본 5억 원 + 타금융 법규에 의한 자기자본(100%) 이상 임원 자본시장법 제24조 적용 배제 타 요건은 신규와 동일

※부수업무 기준을 충족하는 비금융업자는 신규와 동일한 기준 적용
 자료: 금융감독원(2015),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등록 매뉴얼

02 경기도의 시사점

-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크라우드 펀딩 시장을 고려할 때, 경기도는 관련 분야 일자리를 희망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인력 양성 및 틈새 일자리 창출 정책 추진
 - 2015년 현재 국내 크라우드 펀딩 시장 규모는 약 500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2016년 1월 본격적인 제도 시행 이후에는 8,000억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
 - 콘텐츠, 교육, 금융 등 고차 서비스 영역에 대한 취업 희망이 높은* 청년계층들의 욕구와 연계하여 교육 체계 및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창업 지원, 일자리 창출
 - * KDI 조사 결과(2015) 청년의 약 80%가 고차 서비스 영역에 취업을 희망
- 다양한 유형의 크라우드펀딩과 경기도 및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자본이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계·활용될 수 있는 체계 구축
 - 스마트 기술을 활용하여 대중으로부터 소액자금을 모아 생활이 어려운 개인에게 소액대출을 해주는 자활지원형 크라우드 펀딩을 시범사업으로 실시
 - 장기적으로 경제 + IT Tech + 지역자본 + 복지 등 다양한 요소의 연계를 통한 융복합적인 가치 창출과 자원의 효율성 증진을 위한 ‘사회자본은행(Social Capital Bank)’ 형태의 플랫폼 구축

02

사도/사군 복지정책 동향 분석

1. 국민연금 수급현황

국민연금제도는 노후 소득보장 및 노인빈곤 완화를 위해 국가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회보험으로, 국민연금관리공단은 매년 <국민연금통계연보>를 발행하여 전년도 국민연금 가입자·징수·수급·기금·심사청구 현황 정보를 공개

- 전국 17개 시·도 국민연금 수급비율과 평균수급액 분석결과 수급비율은 노인인구가 많은 농어촌지역에서 높은 반면, 평균수급액은 울산·서울·경기 등 대도시 지역이 높음
 - 전국 65세 이상 인구 중 연금수급비율이 높은 지역은 전남(40.2%), 제주(39.2%), 경북(39.1%) 순이며 대전(31.9%)의 수급비율이 가장 낮아, 전남-대전 간 약 8.3%p의 차이 존재
 - 2014년도 지역별 연평균수급액 분석결과 울산(5,247천원)의 수급액이 현저히 많고 그 뒤로 서울(4,246천원), 경기(4,076천원) 순으로 나타남. 반면 가장 평균수급액 규모가 가장 적은 지역은 전남(연 2,985천원)으로, 울산-전남 간 금액 차이는 2,262천원/년 임

<65세 이상 인구의 연금수급비율 및 노령연금 연평균 수급액>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수급비율	34.9	33.7	35.2	34.9	32.4	34.3	31.9	38.6	33.8
평균수급액	3,832	4,246	4,030	3,703	4,038	3,634	4,002	5,247	3,568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연금수급자	32.9	32.2	33.2	34.0	37.2	40.2	39.1	36.7	39.2
평균수급액	4,076	3,528	3,554	3,249	3,102	2,985	3,466	3,713	3,430

*단위: %,천원

- 경기도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국민연금 수급비율은 32.9%로 전국 평균(34.9%) 보다 낮은 반면, 1인당 평균 수급액(노령연금 기준)은 연 4,076천원으로 전국 평균 수급액(연 3,832천원)보다 많음
 - 경기도 연 평균수급액을 월 단위로 환산하면 약 34만원 수준으로 전국 월 평균 수급액(약 32만원)보다 많음
 - 도내 31개 시군의 연평균 수급액은 용인(10,598천원), 과천(10,497천원) 순이며 수급액이 가장 낮은 지역은 동두천(7,993천원)으로, 용인-동두천 간 2,605천원의 금액 차이 존재
- 국민연금은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도입되었으나, 낮은 수급비율과 소득대체율로 인해 안정적인 소득보장기능 미약한 상황. 세계 최고 수준의 노인빈곤율을 고려하면 수급비율 및 급여 수준을 높이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2. 사회투자과 복지를 주제로, 복지경기포럼 개최

- 경기도와 경기복지재단이 공동 주최하는 복지경기포럼이 “사회투자과 복지” 라는 주제로 개최

· 일시 : 2015. 10. 29(목) 오후 2시~4시
 · 장소 : 수원 라마다 호텔 1층 Orchil Hall

- 지속가능한 공공재정의 대안으로 최근 해외에서 성공적인 모델로 자리매김한 사회성과보상사업(SIB) 방식을 경기도 복지사업에 적용한 “탈수급 프로젝트 해봄” 시범사업에 대한 정책 설명과 토론이 진행될 예정
- 참여 대상은 학계와 현장전문가, 사회공헌에 관심 있는 기업, 금융기관 등이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복지재단 홈페이지를 참조 ※ 문의 : 복지전략팀 031-267-9376

03 FACT CHECK

국민연금, 베이비부머의 노후대책이 될 수 있나?

- 2015년 8월 현재 베이비부머(1955년~1963년 생) 738만명의 65.8%인 486만명이 국민연금에 가입했고, 이 중 269만 명인 36.5%가 연금수급권 확보
 - 국민연금 수급권은 10년(120개월)이상 보험료를 내야하며, 10년 미만일 때는 3년 만기 정기 예금 금리(올해기준 2%) 이자와 그간 납부한 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받게 됨
- 2014년 12월 현재 전체 베이비부머의 평균 가입기간은 112.5개월로 수급권 확보를 위해서 가입 기간이 유지되어야 하지만, 이미 퇴직한 경우가 많아 곤란한 상황
 - 남성 베이비부머의 평균 가입기간은 약 151개월, 여성은 64개월이며,
 -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은 1,981,975원이나 전체 베이비부머의 평균소득월액은 1,781,423원으로 평균보다 낮는데 이는 가입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기 때문
 - 남성베이비부머의 평균소득월액은 2,123,932원으로 평균보다 높으나 여성베이비부머의 경우 1,305,561원으로 더 불안정한 노후에 직면할 수 있음
- 베이비부머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최소가입기간 축소(10년→5년), 소득상한인상(상한액 472만원, 하한액 27만원), 소득대체율인상(40%→50%) 등이 논의되고 있으나 국민연금 재정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반대 의견도 존재
- 베이비부머의 노후 소득을 위해 국민연금의 제도 보완과 함께 노동시장에 오래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정년 연장 및 보장, 전직 지원을 통한 가입기간 연장 등도 함께 고려
 - 노인연령 상향 조정 시 노령연금 수급 연령도 상향 조정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

04 통계로 보는 복지

합계출산율과 평균 출산연령



자료: (좌) OECD, 홈페이지, (중)(우) 통계청(각년도), 국가통계포털

- 2012년 기준 OECD 32개국의 합계출산율 평균은 1.70명이며, 우리나라는 29위를 차지
- 2014년 출생아 수는 435,435명으로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70년 이후 2005년(435,031명)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치임
- 모의 평균 출산연령은 32.04세이고, 초산연령도 30.97세이며, 여성의 결혼시기에 따라 25세 미만인 경우 평균 자녀는 2.03명으로 35세 이상(0.84명)인 경우의 2.4배로 나타나 만혼이 저출산에 영향을 미친 것을 알 수 있음